문화·의료 '新산업' 육성을

광주시·전남도 공동 대선공약 10대 요구사업

문화수도-J프로젝트 연계 영산강 생태공동체 조성

광주시와 전남도가 대통령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발굴한 공동 공약사업은 시·도의 주력산업을 하나로 묶어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타 시도에 비해 유리한 여건(문화, 의료 등)을 십분 활용해 새로운 산업으로 부각시키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시·도는 광주·전남공동 첨단산업밸리 조성과 건강·의료 허브단지 조성, 아시아의 문화거점 조성, 공동 SOC 확충 등 크게 4대 프로젝트, 세부적으로 10대 공약을 선정했다. 시·도의 공동공약 발굴은 지역현안 사업의 대선 공약 반영 여부가 차기정부 주요 정책 반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동 공약사항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공동 첨단산업밸리=이 프로젝트는 국도 13번 도로를 따라 광주시 첨단·하남·평동산업단지의 생산 및 지식기반과 담양·장성·함평 등 광주와 인접한 지역, 나주 공동혁신도시 일원을 산업집적지로 새로 조성하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담양·장성 일부 지역 일대를 R&D(연구개발)특구로 지정, 연구소 및 산업기술지원센터 벤처기업·국제교류센터·비즈니스센터·교육기관 등을 집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기존 산업클러스터와 네트워크가 가능한 광주와 나주 공동혁신도시 접경지 일대에 300만평 내외의 공동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강력히 건의키로 했다.

최종적으로 공동 첨단산업밸리는 ▲광주 첨단-연구개발 허브 및 광산업·LED밸리 ▲하남-디지털정보가전 및 기계부품(자동차, 전자 등) ▲평동-첨단부품소재 ▲장성·담양 일원-전자부품, IT, 나노생물소재 ▲나주 공동혁신도시 일원-에너지·생물산업 ▲공동 국가산단-신융합산업 집적화 등을 바탕으로 완성된다. 여기에 첨단산업밸리를 투자촉진지구로 지정, 국내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계산이다.

◇건강·의료 허브 조성=광주의 의료산업 기반과 노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전남의 실버산업 여건을 접목한 프로젝트다.

구체적으로는 광주 광산업과 전남의 생물산업, 전남대 화순병원 의료 시설 등을 100만평 규모로 클러스터화하는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이 첫 번째 과제다. 지역 전략산업을 연계해 첨단의료기기 및 신약 개발, 건강 관련 기능성 산업을 특화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존 의료시설과 연계된 고품격 실버산업단지인 고령친화특구 지정 및 국립노화종합연구소 설립을 병행한다. 또 이들 시설 인근에 노인 관련 웰빙산업과, 레포츠·휴양 시설 등을 망라한 웰빙 건강산업클러스터도 추진한다.

◇아시아 문화거점=광주 문화중심도시와 전남의 J프로젝트 효과를 연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발전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자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영산강 생태·문화공동체조성사업은 문화중심도시와 J프로젝트의 연결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다. 영산강 뱃길 복원(관광자원)과 영산강 고대 문화복원,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 등이 세부적인 사업이다.

이와 함께 영산강 주변 또는 무등산 인근에 문화·예술 복합공원을 만들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걸맞는 세계적인 문화와 예술·과학·생태가 결합한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이 같은 인프라를 기반으로 가칭 '광주·전남 아시아문화축전'을 개최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복안이다.

◇광주·전남 공동SOC 확충=시·도는 국내외 접근성 제고와 관광객 및 투자가 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호남고속철도 노선이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도록 변경해 줄 것과 오송~광주 구간 개통시기(2015년)에 맞춰 광주~목포 구간도 완공될 수 있도록 시·종점 동시 착공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광주권 외곽순환국도(나주~장성 진원~담양 대덕~화순 도곡~나주, 2008년~2013년) 건설과 광주~완도간 고속국도 노선연장(동나주~서광주 구간 연장), 광주~화순·보성~고흥간 고속국도 건설, 광주 KTX정차역~혁신도시~나주간 경전철 건설, 광주~남악신도시간 고속국도 건설 등을 대선 공약에 넣는다는 방침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전남 10대 요구사업

1. 광주권 R&D특구 지정
2. 투자촉진지구 지정
3. 공동 국가산단 조성
4.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5. 고령친화지구 지정
6. 건강산업클러스터 구축
7. 영산강 생태·문화공동체
8. 문화예술 복합 공원
9. 광주·전남 亞문화축전
10. 공동 SOC 확충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조성되는 나주 혁신도시 후보지. 광주시와 전남도는 나주 혁신도시 일대를 에너지·생물산업의 거점이자, 시·도 첨단산업의 발전축으로 개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10대 공약을 잠정 확정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4기 민선자치 1년

4 제역할 못하는 지방의회

'공부' 안하고 '구태' 되풀이

〈입법·예산 감시〉 〈제밥그릇 챙기기〉

민선 4기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컸다. 1991년 출범 이후 15년동안 '풀뿌리 의정' 경험이 축적된데다 유급제가 처음 도입돼 안정적인 활동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급상승한 인기에 비례해 초선의원들의 진출도 크게 늘었다. 하지만 구태는 반복됐다. '민주당 독점' 구도 속에서 같은 당 소속 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비판의 역할은 무뎌졌고, 의회내 주도권 다툼과 '제밥그릇 챙기기' 등 폐습도 되풀이됐다.

민주당 독점 구도…견제·감시 무뎌져

유급제 되자마자 '유급보좌관'도 요구

◇취약한 입법·예산감시 활동=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의 골간을 이루는 자치입법과 예산 심의 등에서 민선 4기 의원들이 거둔 성적표는 초라하다. 민선 4기 1년동안 전남도의회는 54건의 조례안을 처리했지만 이 가운데 93%(50건)는 집행부가 제출한 것이고 의원 발의는 4건에 그쳤다. 광주·전남지역 상당수 기초의회도 의원 발의 조례가 2~3건에 머물렀다. 그나마 광주시의회는 전체 75건 가운데 17건의 조례를 의원들이 발의, 체면치레를 했다는 평가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을 막거나 우선 순위를 조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도 못했다. 지난달 전남도의회 임시회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상임위가 타당성이 떨어진다며 삭감한 예산이 예결위에서 부활,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되는 바람에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한 3선 의원은 "전반적으로 예전보다 예산감시가 소홀해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

◇되풀이되는 구태·후진정치=부실한 의정활동에도 불구 시·도의회는 유급제가 도입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추진, 거센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특히 광주시의회는 시민단체의 '육탄 저지'에도 불구 본회의에서 관련 예산안을 편법으로 통과시켜 '제밥그릇 챙기기'에 골몰한다는 비난을 샀다.

광주시의회는 또 지난해 개원 초기부터 의장선거를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을 노출한데다 광주시의 행정사무감사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도 대의기관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초의회 역시 의정활동은 뒷전인 채 갖가지 편법을 동원, '관광성' 해외 연수부터 다녀오는가 하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둘러싼 볼썽사나운 대립도 곳곳에서 표출됐다.

선거과정의 불법 행위도 의정 활동의 발목을 잡았다. 시·도 광역의원 가운데 2명이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하차해 다시 선거를 치렀고 2명의 시의원은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기초의원도 6명이 의원직을 잃어 지난 4월25일 재·보선을 치러야 했다. 지역구 관리와 정당 활동에 치중하거나 의원으로서 품위를 스스로 손상시키는 행위도 적지 않았다.

◇전문성 제고·정당공천 폐지해야=일부이긴 하지만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구모임을 만들거나 지역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위 구성 등으로 변화를 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전남도의회는 지방자치, 농촌경제, 실버정책, 문화정책 등 4개 의원연구단체를 결성, 전문가들을 초청해 연수활동을 갖고 있다. 광주시의회의 문화수도특위, 전남도의회의 F1(포뮬러 원)지원특위 활동도 주목할 만하다.

전문가들은 지방의원들이 이제 무보수 명예직 시절의 아마추어리즘에서 탈피해 스스로 전문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민들도 정당공천제 폐지로 지방의원의 독립성을 되찾아주고, 주민소환제의 정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감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명박, 여수 기독교 신앙간증회 참석

손학규, 장성서 '2차 민심대장정' 출발

이해찬, 5·18 민주묘지 참배후 간담회

대선주자들 광주·전남 잇단 방문

범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이해찬 전 국무총리, 한나라당의 양대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1~2일 광주·전남지역을 방문하며 기싸움을 펼친다.

이명박 전 시장은 1일 지난 5월29일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이후 1달여 만에 광주·전남지역을 방문했다. 이 전 시장의 이번 방문은 여수지역에서 열린 기독교 신앙간증회 참석차 이뤄진 것이다. 이 전 시장은 2일 광주·전남지역 당협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진 뒤 오전 10시 30분 나주시 금천면 광주·전남혁신도시 예정지를 1시간 동안 돌아볼 계획이다.

1일로 민심대장정 1주년을 맞는 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민생정책 발표회 및 민심대장정 1주년 기념식'을 갖고 '실사구시' 4대 정책을 발표했다. 손 전 지사는 지난해 6월 30일로 경기지사직을 그만둔 뒤 곧바로 전국을 도는 민심대장정을 시작했었다.

손 전 지사는 기념식 직후, 지난해 '100일 민심대장정' 출발지였던 장성 황룡면을 찾아 비닐하우스 토마토 수확작업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16일까지 전국 중소도시와 광역 지자체를 순회하면서 민생정책을 순차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손 전 지사는 장성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2일에는 전북 남원에서 2차 민심대장정 이틀째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 전 총리는 2일 광주를 방문,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간담회와 당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19일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인천-충청-강원의 '중·서부 벨트'를 방문한 데 이은 것으로 호남권 공략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